

[종합]

■ 이명박 후보 검증 검찰수사 3대 주안점

**① 김씨땅 실소유주는?
② 흥은프레닝 특혜 의혹
③ 개인정보 유출 경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둘러싼 검증공방 고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가급적 8월19일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 입수와 관련자 소환 등 작업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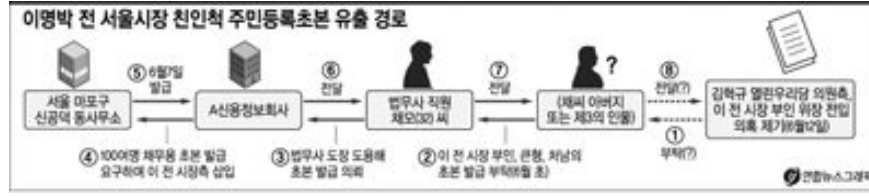
검찰은 현재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 ▲(주)다스 자회사 흥은프레닝의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공공기관의 후보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진도가 '4대 4대 3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씨땅** 땅 '그물망 검증'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1982~1991년 전국 47곳에 토지 224만㎡를 소유한 사실과 김씨와 이 후보의 말쑥이 함께 사들인 도곡동 땅 306㎡ 등을 포스코개발에 팔아 247억원의 차익을 얻은 부분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수사의 과제는 김씨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혹시 이 후보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일부 토지라도 이 후보가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후보에겐 처벌된다.

김씨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1995년 이



전에 이뤄져 검찰은 김씨 소유로 된 토지 목록을 토대로 일일이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타운 지정 미리 알았다**=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시점 상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흥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개발 특혜 의혹은 비교적 최근(2003~2005년)의 일이라서 수사 진도가 빠른 편이다.

검찰은 흥은프레닝이 천호동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시공사 관계자들이 연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흥은프레닝이 서울 성내동 땅 2천387㎡를 주변 지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3년 3~9월 매입한 데 시의 사전 정보유출은 없었는지,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허가하는 데 강동구청 또는 그 직선의 특혜는 없었는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부분은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흥은프레닝 대표이사 이 후보의 대학(고려대 경영학과) 동기 동창인 안순용(65) 씨가, 감사는 이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67) 씨가 맡고 있어서 이 후보와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었는지가 의혹 대상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국제청과 행정자치부, 경찰청,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전과·주민등록 정보 접속 기록 작업을 자료를 신속하게 받은 데 반해 수사 진도는 약간 뒤쳐져 있다.

접속 기록 자체가 방대하고 일부 기록은 IP만 나타나 누가 어떤 컴퓨터로 접속했는지를 밝혀내는 일부터 쉽지 않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다만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사건은 관련자가 얼마되지 않아 실제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시 설

‘가짜 학위’ 감독 파문, 비엔날레 차질 없어야

가짜 학위와 논문 표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씨의 광주 비엔날레 공동감독 선임이 철회됐다. 하지만, 신씨의 중도탈락으로 내년 9월 열리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신씨의 발탁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진의 책임론마저 불거지는 등 그 파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가짜 학위’ 감독 파문은 후보의 자질 검증은 물론 선정과정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재단 측의 책임이 크다. 한갑수 재단 이사장은 신씨의 가짜학위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발탁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가짜 학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이런 무자격자가 공동감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선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오래 끌면 필수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내년 비엔날레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엔날레 재단 측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하루빨리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등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해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더 이상 내부 갈등과 인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 잇단 해외 유출 대책 서둘러라

국내 대형 조선업체 전직 직원이 중요 설계 관련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자, 자동차에 이어 조선업계도 기술 보안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 기술의 중국 유출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법당국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대우(53)씨는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등 선박 69척의 제조기술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가 무려 15만장의 선박 설계도면으로 피해 추정액만 1천3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고급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조선산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 최강으

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LNG선, 에너지 관련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의 설계· 건조 기술은 독보적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흘러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IT(정보기술)을 비롯 우리의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보안체계는 아직 취약하다. 오죽하면 ‘산업스파이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까. 기술유출의 대부분이 국내기업의 전·현직 직원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윤리의식과 보안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연구비와 시간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는 것은 국가적 범죄다. 엄청난 부(富)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와 기업은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료 열람”

김재정씨 부동산 현황 행자부 전산망 통해 확인

국가정보원은 직원 한 명이 지난 해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 자체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직원 1명이 지난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행자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열람자료의 활용, 상부보고, 대외유출 여부 등을 자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열람한 부동산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김재정씨 등이 후보의 친인척과 관련된 것이며, 거래내역이 아닌 부동산 현황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상부보고나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관계자는 열람시기에 대해 “김만복 원장이 취임(2006년 11월23일)하기 한참 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9월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철저한 자체조사와 함께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해 실제적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관련해 떠도는 문건의 출처 등과 관련, ‘국정원 역할론’이 제기되고 8일에는 ‘이명박 X파일’ 의혹까지 추가되자 자체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이날 “국정원이 김승규 전 원장 시절인 2005년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재정씨 휠체어 출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13일 오후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최악’

반도체값 급락 여파...영업이익 9,100억원

삼성전자가 반도체값 급락 여파로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1년 4분기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와 LCD 등 주력제품 가격이 최근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어 3·4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폭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14조6천300억원, 영업이익 9천100억원, 순이익 1조4천2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1분기에 비해 매출은 2.0%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3%, 11%씩 대폭 하락한 것이다. 2분기 세전이익도 1분기 1조8천400억원에서 12% 감소한 1조6천200억원에 그쳤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2001년 4분기 690억원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

해 시장 기대치(영업이익 평균 전망 9천110억원)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반도체값 하락 등 사업여건과 3천억원대의 마케팅 비용증가를 감안한다면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더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상승 등 IT 호조세와 LCD 업황 개선 등을 놓고 볼 때 3·4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사업부문별 실적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공급과잉에 맞물린 가격급락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5%, 39% 감소한 4조2천600억원, 3천300억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은 분기 사상 최고치인 휴대전화 3천740만대 판매 달성을 이뤘지만 매출의 경우 2% 감소한 4조5천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41% 줄어든 3천500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전남도 하위직 인사 ‘유사 퇴출제’ 주목

전남도가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인사팀단 4면)

김재근 전남도 행정혁신국장은 13일, 5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진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6급 이하 직원 가운데 각 실·국장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인물이 11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현재의 자리에 놓아둔 채 6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이 6개월 후에도 뚜렷한 업무실적이나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중심 부서로 배치하거나, 교육을 보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서울시 등이 도입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전남도도 이 같은 퇴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한을 정해두고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현업부서 등에 배치한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퇴출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국장은 “다음 인사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종교·자선단체 가짜기부금 영수증 처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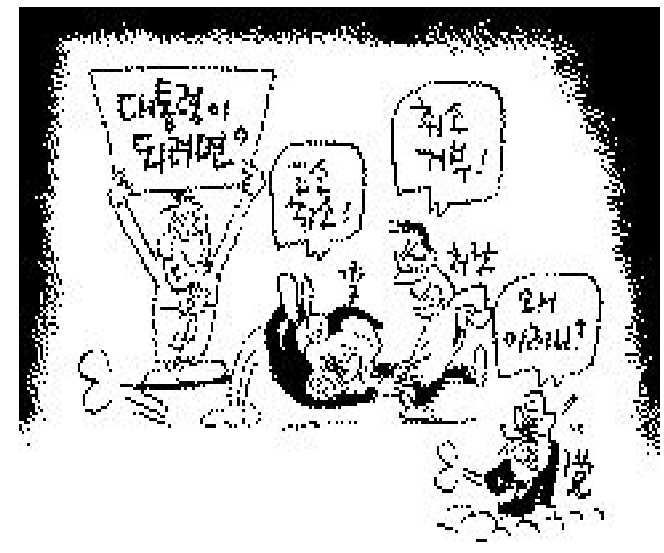
종교·자선·예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제청이 매년 상호검증(Cross-Check)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3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조세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부금회계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우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수령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금별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않을 경우 현행 각각 1%와 0.1%를 부과하고 있는 가산세를 2%와 0.2%로 높이도록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코미디는 기본으로 해야 하나 보다

최기문 기소·이택순 청장 무혐의 증시 ‘꿈의 2,000 시대’ 임박

검찰 ‘보복폭행’ 사건 능자·외압의혹 수사 13일 코스피지수 53p 급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능자·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이 유가급 한화증권 고문과 사건 이후 팔포를 친 사실 등은 확인했으나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잡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고 흥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화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13일 최 고문과 김도 한화그룹 전라기획팀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흥 전 청장 등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입건유예하되 흥 전 청장 등 경찰 8명을 징계 통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최 고문이 경찰 간부들, 김도 한화리조트 감사와 오모 맘파고 두 목이 남대문서 로비 및 피해자 무마를 맡아 전방위적인 로비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이 코스피지수 2,000 시대에 바짝 다가섰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53.18포인트(2.78%) 급등한 1,962.93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초로 1,900선을 돌파한 지수가 이날도 뉴욕증시의 급등 소식에 50포인트 이상 올라 이제 2,000선까지는 불과 37.07포인트(1.89%)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 들어 42번째로 증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이날 지수 상승폭은 2002년 2월14일 56.32포인트 오르 이후 최대이며 지수 상승률은 작년 7월20일 3.21% 급등한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외국인 매도 여파로 2.82포인트(0.34%) 하락한 825.40에 잠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시가총액은 작년 말 776조7천249억원에서 이날 1천79조9천760억원으로 303조2천511억원이나 늘었다. 올 들어 한 국전력(시가총액 29조6천725억원)만한 상장사가 10개 이상 새로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Also includes a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and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news.